

완주군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목 차

I. 들어가며

II.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정 혁신

1. 완주군의 지역농정

- 1) 중장기전략 :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 2) 로컬푸드 정책도입의 필요성

2. 종합적인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의 수립

- 1) 로컬푸드 영역의 구분, 분리대응
- 2) 로컬푸드 통합추진전략의 수립

3. 로컬푸드 조직화 과제와 추진

- 1)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를 위한 지역농업 재편
가. 마을 및 작목반 단위 공동생산의 장려
나. 농민가공 활성화
다. 로컬푸드 계약재배 활성화
- 2) 로컬푸드 소비시장의 확충
- 3)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III. 완주군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추진사례

1. 건강밥상꾸러미사업 개요 및 전개행태 분석

- 1) 사업개요
- 2) 건강밥상꾸러미사업 전개행태 분석
가. 상품의 기획 및 가격결정
나. 생산자 참여
다. 관계마케팅(회원모집) 및 소비자 구성
 - ① 결제방식에 따른 구분
 - ② 배송간격에 따른 구분
 - ③ 배송방법에 따른 구분

- 라. 생산자-소비자간 신뢰증진 프로그램
- 마. 민간추진조직 활성화
- 바. 지자체(행정)의 역할

2. 건강밥상꾸러미 활성화를 위한 과제

IV. 나가며

참고문헌

완주군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

강 성 욱(완주군 로컬푸드 팀장)

I. 들어가며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이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위기다. 근본 원인은 농업의 세계화에서 비롯되었다.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에 의해 주도되고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DDA(다자간무역협정)-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 등 국제무역질서를 등에 업은 '녹색혁명형 농업'과 '먹을거리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러온 결과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대안먹을거리체계인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기존의 농식품체계를 대체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은 지역농업 조직화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수립과 민관협력추진체계를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자유무역질서하에서 개별영농으로는 대응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자각에서 지역 내 한정되어 있는 지역자원(토지, 노동력, 자본)을 지역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 이용하여 지역전체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체계(total system)로서의 지역농업 조직화가 실사구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수 소농의 토지를 소수의 손에 집중하여 '국제경쟁에 견딜 수 있는 근대적 기계화 농업을 확립하는 것', 즉 단일작목 중심의 규모화농 육성이라는 농업구조개선에 몰두해 왔다. 이 과정에 다수의 소농, 고령농은 정책적 소외 및 재촌탈농의 위기에 내몰렸다. 지역 내 농가간 소득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 조직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령농과 겸업농을 지역전체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의 주력군으로 재 조직화하기 위한 지역농정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설계가 요구되고 하겠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줄이는 일, 즉 예측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회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푸드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간의 조직화된 역량과 지자체의 농정혁신이 서로 맞물릴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II.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정 혁신

1. 완주군의 지역농정

1) 중장기전략 :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완주군 지역농정혁신은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¹⁾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약속프로젝트는 생산혁신, 유통혁신, 부채대책,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 등 5개 분야 12개 시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II-1>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2008)

5대 정책	정책목표	세부 지역농정혁신 시책
생산혁신	생산비 절감 친환경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한우 경쟁력 동반강화 대책 - 경종·축산간 지역자원 물질순환시스템 구축
유통혁신	소농 3천농가 월1백만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인 로컬푸드 실현 - 10년 내 지역농산물 30%이상 로컬푸드 유통
경영혁신	기금 100억원 부채농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경영실태조사 - 무이자 경영회생자금지원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
활력증진	마을회사100개 농업6차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거점 마을 회사 100개소 육성 - 도농교류 거점마을 육성 및 상호 연계
복지혁신	현장맞춤 복지 생산적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노인복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8272생활민원기동반 지원 -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두레농장 등) 제공

완주군, 약속프로젝트 추진 5개년 계획, 2008

본 프로젝트에는 자체 군비 50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들 사업은 상호 밀접한 연계성속에서 추진되며, 로컬푸드의 경우 지역순환농업체계 구축과 마을 및 공동체육성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2) 로컬푸드 정책도입의 필요성

지역농업의 특성과 과제에 비추어 볼 때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5,000여 가구에 이르는 1ha미만의 가족소농, 고령농의 조직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한다. 다품목 소량생산과 직거래유통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푸드는 가족소농 및 고령농이 핵심 참여주체가 된다. 둘째, 대도시 배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로컬푸드형 틈새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65만 전주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과 유통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지역소비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로컬푸드는 다수 농가의 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한다. 로컬푸드는 얼굴있는 먹을거리를 매개로 소비자와 대면접촉 확대를 전제하므로 지역농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순환농업시스템과 맞물린다

1) 2008년 신설된 농정기획단에서 지역농업 중장기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기획, 입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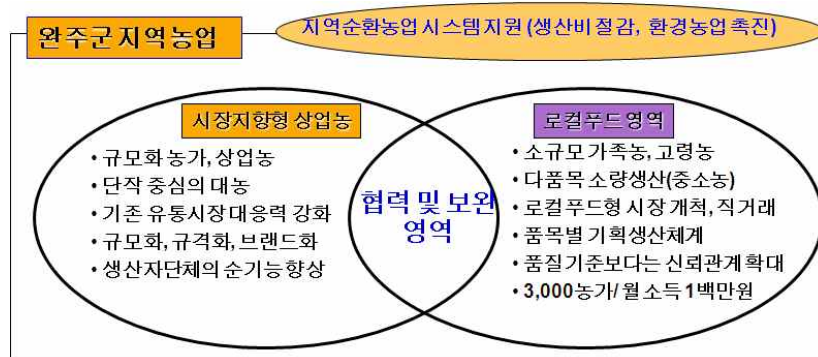
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넷째, 로컬푸드는 농민가공을 촉진한다. 소비자밥상에 필요한 품목의 기획생산은 마을단위 혹은 작목반 단위의 공동가공을 활성화한다. 단, 농민가공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로컬푸드는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지로서의 통합적 지역이미지 구축에 기여한다.

2. 종합적인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의 수립

1) 로컬푸드 영역의 구분, 분리대응

일반적으로 지역농업에서 로컬푸드 시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정책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간 지역농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국가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단작화·규모화·상업농 육성에 주력해왔고, 그 결과 소수의 상업농에게 각종 정책과 자금, 정보가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고, 가족소농이 조직화의 핵심주체가 되므로 기존의 상업농 영역과 분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업농과의 협력 및 보완영역을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소규모 가족농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생산-소비 영역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림 Ⅱ-1>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대상과 특징

2) 로컬푸드 통합추진전략의 수립

완주군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기준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로컬푸드형 생산·유통·소비의 조직화다. 우선 기획생산은 마을공동체 및 작목반단위 1차 농산물 조직화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지원을 위한 거점농민가공센터 등이 포함된다. 유통조직화는 원활한 물류에 필요한 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스테이션, 전문매장, 직거래장터 등을 포함한다. 소비조직화는 일반소비자, 출향인, 공공조달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마케팅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둘째는 추진조직의 정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조례의 제정이다. 추진조직은 행정,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되

었다.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프로세스는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 정책프로세스

구분	정책명	세부내용	비고
정책 목표	조직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가족소농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 0.5ha미만 농가 3,412농가(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1ha미만농가 참여 ※ 상업농과 협력·보완 관계 초기단계 분리대응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소득 1백만원 보장 (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 새벽시장 참여농가 : 연평균 소득 1000만원 기준
정책 수단	기획생산체 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농식품 기획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품목의 연중기획생산 - 작목반, 마을, 지역공동체 ■ 농민가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사업형 가공산업 육성 -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 운영 	마을 및 품목단위 가족소농의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량의 규모화 및 효율적인 생산관리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확보(틈새,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밥상꾸러미/로컬푸드스테이션 / 전문매장/ 직거래장터/ 공공조달/ 복지분야 	※건강밥상꾸러미, 로컬푸드 스테이션이 1차 추진과제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통합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 제3섹터형 농업회사법인 	2011년 중 봉동읍 울소리에 설치완료 예정
추진 조직 정비	민간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밥상'	2010. 5 발족/ 마을공동체 대표로 이사회 구성
	중간지원 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로컬푸드팀'	현장 조직화 지원조직
	관(행정)	농촌활력과 내 로컬푸드 담당	2010. 8 농촌활력과 신설
제도 정비	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로컬푸드조례, 시행규칙 ■ 완주군 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직불금은 현재 도입 검토 중

3. 로컬푸드 조직화 과제와 추진

단작화와 시장지향형 농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역농업 여건에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자면 필연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밥상품목 중심의 지역농업 재편 전략-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의 조직화 둘째, 로컬푸드 소비시장의 확충 셋째, 주체의 양성 및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이 그것이다.

1)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를 위한 지역농업 재편

현재의 시장판매형 단일작목 중심의 생산체계로는 소비자 밥상의 다양성을 채울 수 없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품목수가 200가지를 상회하므로 단작화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나 지역생산이 가능한 품목, 가공품목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수

단을 통해 생산을 재조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소비자 밥상품목의 다수는 가공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농민가공 활성화는 로컬푸드 기획생산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역과의 제휴푸드로 연계해 갈 필요가 있다. 완주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

가. 마을 및 작목반 단위 공동생산의 장려

가족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농업 상황에서 공동체사업에 의한 생산량의 규모화는 기본적인 지역농업조직화 전략이 된다.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라는 로컬푸드의 특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물량의 확보측면과 품질의 균일화를 위한 효율적인 생산관리 측면에서도 생산조직화는 필수적인 요소다. 문제는 이 같은 생산조직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 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완주군의 시책은 다음과 같다.

<표 Ⅱ-3> 로컬푸드 생산거점 조직화 유형

사업명	사업특성	사업량	사업비	생산품목
두레농장	공공의 시설에서 농촌노인과 귀농자가 함께 짓는 친환경농사	5	개소당 2억원	한우, 유정란, 딸기, 양파, 채소 등
파워빌리지	1차, 가공, 체험 등 농업6차산업화	17	개소당 1억원	된장, 청국장, 절임류
참살기마을	초기단계 공동협업	40	개소당 3천만원	다양한 1차 농산물, 전통장류
맛있는 마을	전통식품발굴, 사업화	20	1백만원	밀반찬 류
커뮤니티비즈니스	주민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2	유형별	떡가공상품, 제빵제과
작목반	일일신선식품 기획생산 등	3		유정란, 두부, 콩나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1		두부, 밀반찬
자활센터	일자리 통한 자활 유도	1		참기름, 들기름, 표고간장, 표고가루 등

첫째는 생산적 노인복지와 연계한 두레농장의 확산이다. 자연부락 내 공동의 작업장과 공동 취사공간이 조성되고, 귀농자의 정착률을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이 조성된다. 농촌노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안정, 공동식사를 통한 건강증진, 귀농귀촌자의 정착률, 인근학교와 연계한 학생들의 식생활교육, 생산물의 로컬푸드 유통 등을 목적으로 발굴된 완주군 고유사업으로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는 각종 마을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다. 현재 완주군에는 약 104개에 이르는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에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사업, 경관사업, 도농교류사업이 진행되는데, 각종 가공식품(장류, 밀반찬, 두부, 콩나물, 유정란 등)생산거점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셋째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등과의 연계성 강화다.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기획생산 총괄계획

수립단계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하다.

나. 농민가공 활성화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시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마을회사 육성
성과 연계한 주민 공동가공사업의 추진이다. 마을에서 생산하는 전통방식의 각종
가공식품은 훌륭한 로컬푸드 상품이 된다. 또한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해 맛있는 마
울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군 대표축제로 와일드푸드 축제를 통해 약 150가지의
향토요리상품을 발굴해내고 있다. 둘째는 제조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농민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가공시설, 즉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
업이다. 2011년 8월 중 1개소를 개관, 시범운영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
략이다. 운영과정에서 로컬푸드 시장이 우선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마을에
서 원물을 생산하고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 이를 생산, 로컬푸드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을 접목해 나가게 된다.



<그림 2-2> 완주군 거점농민가공센터 구상

다. 로컬푸드 계약재배 활성화

계약재배는 얼굴있는 먹을거리로서의 가치를 조직하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수의 소농과 다품목을 계약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종합 관리가 매우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안정된 물량확보와 품질의 균일화 또한 까다롭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대두된
다. 좀 더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토양, 지리, 기후적 환경을 고려하
여 생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규모화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좁게는 자연부락
단위, 넓게는 읍면단위로 점에서 선으로 품목별 생산량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
다.

로컬푸드 계약재배는 일반시장의 계약재배에 비해 농가와 유통주체간의 보다 긴
밀한 협력체계를 요구한다. 로컬푸드형 상품의 가이드라인은 일반시장이 요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일반시장의 상품기준이 규격화·모양·색깔·무게 등이라면
로컬푸드형 상품은 지역산·제철·신선도·맛·토종종자 우선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얼굴있는 먹을거리’라고 해서 그 안전성 기준면에서 반드시 무농약, 유기농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단, 생산이력관리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환경농으로의 전환 프로세스를 인증제도와 연동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계약재배 추진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참여농가의 작부체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유통을 실시해야 저변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또 참여농민의 계약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작목반 또는 마을 공동체단위의 공동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점에서 선으로 소농을 조직화하는 방향과도 부합한다.



<그림 II-3> 완주군 로컬푸드 기획생산 조직화 방향

2) 로컬푸드 소비시장의 확충

로컬푸드형 소비시장의 확대는 일반소비자의 측면과 공공조달의 영역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단순한 소비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기존의 글로벌푸드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로컬푸드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는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밥상꾸러미(CSA), 로컬푸드스테이션(상설 농민장터), 직거래장터, 전문매장, 출향소비자 조직화 등이 이에 속한다.

<표 II-4> 완주군 로컬푸드형 소비시장 유형

단계구분	시기구분	소비자 특성	비 고	추진여부
1단계(직거래) 2010~	꾸러미	소비자 가구	매주/격주 (직배. 택배) 꾸러미가격 25,000원	추진 중
	이동장터	정기적인 장터개설	3.5톤 트럭 활용	추진 중
	결식아동	지역산 안전먹거리 공급	연간 8억원 규모	추진 중
2단계(상설매장) 2011~	스테이션	복합먹거리교류센터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시민텃밭, 가공체험 등	계획수립단계
	전문매장	소규모 전문매장	상설/ 샵인샵	계획수립단계
3단계(공공조달) 2012~	학교	안전성, 식단, 친환경	지역먹거리식량정책 협의회 연계 추진	준비단계
	병원	안전성, 건강식단, 가격경쟁력		
	지역식당	연중공급, 가격경쟁력		
	사회복지 관련	연중공급, 가격경쟁력		

지역식량정책협의회 등 공공적인 먹을거리 조달체계가 정책영역에서 도입된다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병원, 기업,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복잡한 과정인 공공조달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단 공공조달은 다양한 품목의 연중생산 시스템과 더불어 안정된 저온물류유통시스템이 확보될 때 적용가능하다. 학교급식은 로컬푸드 조직화에서 가장 높은 완결성을 요구한다. 친환경급식의 품목별 기반이 지역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푸드와 맞물릴 필요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를 뛰어넘어 로컬푸드 농식품으로 만든 건강 학교밥상 모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로컬푸드 중심의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소비시장의 창출, 안정된 물류시스템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누가 책임있게 진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조직화의 대상, 품목의 다양성, 가공식품의 비중, 유통소비방식,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의 합의 측면에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농협이나 시군유통회사와 확연히 구분된다. 또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나 전국 물류에 기초해 친환경농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생협조직과의 차별성도 존재한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반드시 기획생산의 확대, 소비시장의 확대와 연동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의 동반확대 없이는 시설과 물류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통합지원센터는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생산농가, 소비자, 생산자단체(농협), 소비자단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3 섹터형 농업회사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5>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상

기능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획생산	품목별 기획생산, 계약재배, 가공상품 및 슬로푸드 확충	2011.10 중 완료예정
통합물류	신선편이가공시설, 저온유통물류시설, 저온저장시설, 선별작업장, 교육문화공간 등	
커뮤니케이션	생산자-소비자 연대 프로그램, 푸드마일 캠페인 다양한 도농교류 조직화, 식문화교육프로그램	

Ⅲ. 완주군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추진사례


공동체지원농업(CSA)은 세계화된 식품체계의 지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수단으로서 사회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를 식품 생산과 소비를 결합시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완주군의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은 이러한 공동체지원농업의 초기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완주 건강밥상꾸러미는 지자체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대부분이 사회운동적인 형태로 추진되어 온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과 과제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1. 건강밥상꾸러미사업 개요 및 전개행태 분석

1) 사업개요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은 완주의 생산자와 전주권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CSA(지역사회지원형농업)모델이다. 지역에서 난 제철먹을거리를 꾸러미 형식으로 꾸러 일반 소비자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주권 소비자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며, 연 480억원 매출과 지역생산물의 16%를 직거래 유통하는 경제적 효과를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 건강밥상 꾸러미 개요

건강밥상꾸러미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형 CSA모델(건강밥상 꾸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 유정란, 콩나물, 제철채소, 과일 등 11품목 - 주 1회, 월 4회 공급(현재 격주 회원이 다수) - 꾸러미 개당 가격 25,000원 - 1개월(시범), 3개월, 6개월, 12개월 선납 - 직배 또는 택배방식(택배비 건강밥상 부담) ○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 밥상'에서 추진

지난 2010년 10월 중순 141가구 공급으로 시작된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은 2011년 5월 현재 2,440가구(매주 회원 277가구/ 격주회원 2,167가구)로 회원수가 늘었고, 월 공급물량은 4,838개에 달한다.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억2천여만원 규모다.

2) 건강밥상꾸러미사업 전개행태 분석

가. 상품의 기획 및 가격결정

현재 취급하는 상품은 기본꾸러미 1종이다. 기본꾸러미는 크게 일일신선식품 3종(유정란, 두부, 콩나물)과 제철채소(신선채소류), 제철과일(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포도, 배 등), 가공식품(청국장, 된장, 표고간장 등),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 11가지 품목으로 구성된다. 냉이나 썩과 같은 자연채취물도 기획상품으로 공급된다. 향후 맛별이 부부를 위한 밑반찬 꾸러미, 과일과 육류중심의 특별꾸러미를 추가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역의 생산 기반과 연계함으로써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기본꾸러미의 가격은 25,000원으로 연중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 1주 소비를 고려하였다. 꾸러미 기획단계에서부터 일반 시중 가격과는 최소한 5,000원 정도 싸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비는 공급자(영농법인 건강한 밥상)가 부담한다. 행정에서는 꾸러미 손익분기점인 1만 가구 공급 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나. 생산자 참여

생산자는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 밥상’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1차적인 납품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조직화의 측면에서 마을 및 작목반단위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장려한다. 특히 전략상품이 되는 유정란, 두부, 콩나물의 경우 작목반 조직화를 전제로 생산을 확대한다. 2011년부터는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해가고 있다. 생산방식은 무제초제를 근간으로 하는 저농약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되,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납품 시 가격은 최근 3년간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를 상회하도록 조정한다. 농가에 대한 대금 결제는 1주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다. 관계마케팅(회원모집) 및 소비자 구성

꾸러미 소비의 조직화에서 핵심은 관계마케팅이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고 배려하면 건강한 밥상과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 언론, 방송과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스팟광고, 다큐멘터리, 시사토론, 언론기고 등)과 더불어 입소문 마케팅을 조직화하였다.

① 결제방식에 따른 구분

소비자에게는 1개월간의 시범구매를 거쳐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선불제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회원관리는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금확인 후 배송이 시작된다.

<표 Ⅲ-2> 결제방식에 따른 소비자 구분

회원유형(선납금)	합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회원수(가구)	2,440	1,400	800	214	26

② 배송간격에 따른 구분

월 4회에 공급되는 매주회원이 273가구(11.2%), 월 2회 공급되는 격주회원이 2,167가구(88.8%)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되는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점(기본꾸러미 1종), 맛별이 및 외식의 비중이 높은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밥상품목을 연중,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및 물류, 상품구성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③ 배송방법에 따른 구분

꾸러미 상품의 소비자 전달방식은 택배가 2,163가구, 직배가 277가구다. 직배의 경우 별도의 꾸러미전용상자를 활용해 공급하는데, 현재 수거가 가능한 단위(공무원 소비자)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꾸러미 전용상자의 경우 1개당 제작비가 77,000원으로 고가인 점이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컬푸드가 환경을 살린다는 공익 가치를 고려하여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직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와의 대면적인 관계를 통해 상품 및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라. 생산자-소비자간 신뢰증진 프로그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꾸러미사업 초기에 실시한 꾸러미가족 마을팸투어사업(2010년 10월/ 3회)과 직거래장터 체험행사(2010.10/1회), 건강밥상에 대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2011년 6월/ 2회)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업의 확대와 맞물려 연중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꾸러미 공급 시 함께 제공되는 ‘식탁의 푸른 신호등, 건강밥상꾸러미 편지’가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상의 소식지 발간, 제철음식책자 발간 등의 사업으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최근 활동을 시작한 ‘건강밥상꾸러미 주부모니터’는 자발적인 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드백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민간추진조직 활성화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의 추진주체는 2010년 5월 발족한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밥상’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 중인 리더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행정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밥상꾸러미사업과 더불어 향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로컬푸드스테이션 운영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바. 지자체(행정)의 역할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이 단기간 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가 로컬푸드를 지역농업 활성화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되 생산과 소비의 확대에 따른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행·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된다. 이 같은 군의 정책적 접근이 민간주체의 자리매김과 자율적인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로컬푸드 생산-소비를 일정 규모로 육성해가는 데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유통혁신과제로 로컬푸드를 반영하였다. 안정적인 로컬푸드의 생산-유통-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 7월에는 행정 내 전담조직인 '로컬푸드 담당'을 신설하였고, 현장조직화를 도울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담계약직을 채용, 로컬푸드팀을 운영하고 있다. 2010. 11월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Ⅲ-3> 완주군 로컬푸드(건강밥상꾸러미)사업 추진과 행정의 역할

구 분		내 용
로컬푸드 정책도입 경과		2008. 8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중장기 과제 포함)
		2009. 5 완주군 로컬푸드통합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
		2009. 6 완주군 로컬푸드 대토론회
		2009. 7 로컬푸드활성화TF팀구성, 운영
		2009. 9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2009. 12 로컬푸드 추진 4개시군 연석회의 추진
		2010. 5 로컬푸드 영농법인 건강한 밥상 발족
		2010. 7 행정(농촌활력과)내 로컬푸드 담당 신설
		2010. 10 건강밥상꾸러미 공급사업 시작
		2010. 10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 제정
		2010. 9 로컬푸드 전국대회 개최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 개정, 규칙제정
전담조직		○ 완주군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담당(2010. 7 신설) - 중간지원조직 로컬푸드팀 운영(민간전문가 팀장) ○ 완주로컬푸드영농법인, 건강한 밥상(2010. 5)
예 산 (백만원)	2011년 (4,287)	○ 완주로컬푸드통합센터건립(1,800) ○ 거점농민가공시설 건립(1,000) ○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820) - 완주로컬푸드마일리지(15) - 꾸러미사업단 운영(191) - 완주로컬푸드 마켓2개소운영(160) - 기획생산 및 주민역량강화(61) - 우수사례 벤치마킹(55) - 로컬푸드 활성화사업(185) • 인증시스템 개발/ 소비자 팸투어/ 홍보영상물 제작 등

2. 건강밥상꾸러미 활성화를 위한 과제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의 안정된 경제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계약재배에 기초한 기획생산체계의 안정적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필요품목의 임시 수집방식으로는 꾸러미의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소농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존시장에 출하하는 것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건강밥상꾸러미 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의무감을 갖지 않는다.’, ‘건강밥상꾸러미는 안정된 유통망의 하나일 뿐이다.’ 등과 같은 생산자의 인식으로는 로컬푸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단위 공동사업과 연계하여 소농가간 협력을 통해 기획생산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더불어 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서도 필수적이다. 계약재배를 조직화하는 과정이 곧 얼굴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의 의식전환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작부체계에 의거, 농산물을 일정한 규모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된 물량을 온전히 유통하기 위해서는 소비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건강밥상꾸러미 외에도 전문매장, 이동식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스테이션 등을 통해 안정된 소비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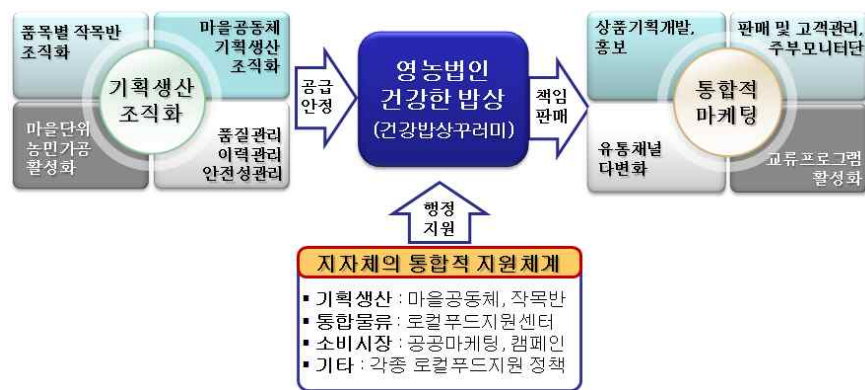
<표 III-4> 일일신선식품의 기획생산 확대 방향 (1만 가구 공급 기준)

품목	기획생산량 (1주 단위)	최적 생산시설 (사업비)	일자리창출 (소득)	비고
유정란	- 10만개 - 2만수 필요 - 5개 마을	- 마을당 2,000수 이내×5개소 - 하우스식 계사 (8×80m) - 300평(건물180평) - 창고,저란실 등 별도 ▶초기투자 : 6천5백만 - 초기준비금(2천만/명아리 등) - 건축비(1천5백만) - 내부시설비(3천만)	- 연소득65백만 - 마을주민6명	시설 후 본격생산 1년 소요(예비대응) ※두레농장 ※향토산업마을
두부	- 1만 모 - 원료콩3.3톤 (24모당 8kg)	- 마을당 주 500모 생산 - 20개소 마을 참여 - 2000평에서 콩 기획생산 ▶초기투자 : 3000만원	- 연소득1680만원 - 마을주민 3명 - 월40만원(8일)	자체식품제조허가 (오페수수거방식) ※참살기마을사업
콩나물	- 1만개 - 원료콩3톤 (1천개당 300kg) - 연중 25톤(3만평)	- 1개 마을 육성 - 부지 200평(건평50평) ▶초기투자 1억5천만	- 연소득 8400만 - 마을주민 5명 - 월100만원(25일)	재배사 시설 ※향토산업마을

둘째, 밥상품목 다변화를 위한 가공식품제조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꾸러미는 1차 농산물을 위주로 구성,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밥상의 1/2은 가공품이 차지한다. 실제 소비자들의 품목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가공품 중에는 전통적인 먹거리, 즉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계절김치, 천연조미료 등 일반 시중에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슬로푸드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건강한 밥상이라는 테마에 부합하는 각종 건강음료, 즉, 두유, 녹즙 등과 채소 드레싱류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얼굴있는 먹거리에 대한 생산자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꾸러미에 납품하는 생산자의 다수는 로컬푸드의 가장 큰 전제인 얼굴있는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보다는 안정된 유통망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지, 마음이 담긴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생산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 결과가 생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꾸러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불만사항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를 생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의 작동이 중요하다. 이것은 건강밥상 꾸러미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다. 최근 발족한 주부모니터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 즉,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관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호 배려하는 관계가 로컬푸드 확산의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Ⅲ-1> 건강밥상꾸러미 생산-유통-소비구조

다섯째, 사업의 확장과 다각화에 따른 운영조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이 월 5,000개에 육박하게 되면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100여 가지 품목의 연중기획생산체계 구축, 농민가공을 통한 공급품목의 다양화, 계약재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는 완주군 로컬푸드의 당면과제다. 마을리더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영농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전문 마케팅조직으로 확대, 재편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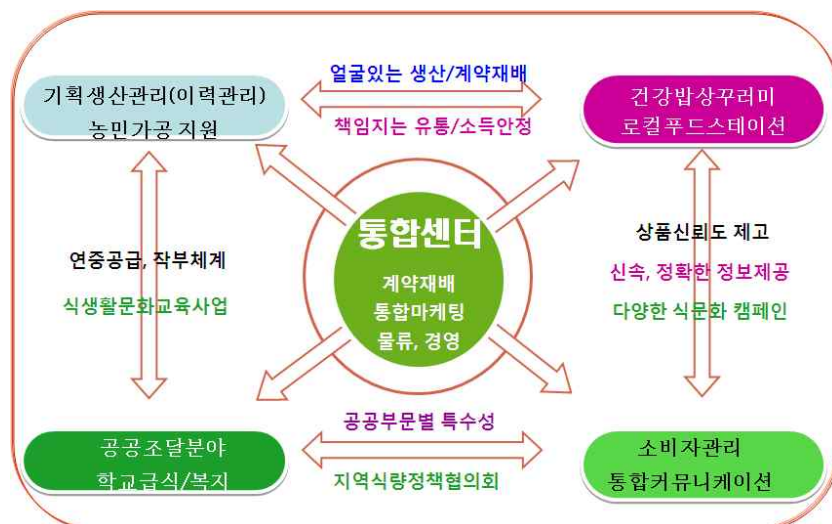
IV. 나가며

세계농식품체계(global food system)하에서 다수 농가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 차원의 공동대응이 불가피하며,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수립과 농가 조직화, 농정주체간 협치(governance)를 높여가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좁히고, 그간 정책적 소외를 겪어온 소농의 조직화를 통해 규모화농 일변도로 추진되어 온 농업구조개선의 폐해를 현장에서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강력한 글로벌푸드 체계에 포섭되어 있는 우리 농식품 생산, 유통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먹거리 질서를 창출하는 일은 민간운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정책이 상호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지역과 지자체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농업 조직화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실적중심의 이슈파이팅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완주군 로컬푸드는 지역농정혁신을 통해 생산-유통-소비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만하다. 특히 생산부문에서 소농과 지역공동체를 로컬푸드 생산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농민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농민가공센터를 구상, 추진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또 정책에 부응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민간조직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하여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또 민관협력에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정립이 바람직하다. 행정이 지나친 주도성을 갖게 되면 민간의 의존성을 높이고, 자칫 성과중심으로 흐르기 쉽다. 이는 완주군이 극복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림IV-2> 로컬푸드 통합추진체계(지자체-완주군 사례)

지역농정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다품목 소량생산체제로 지역농업의 일정 영역을 재편하는 것이다. 기획생산 조직화에서 핵심은 소농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농민가공은 품목의 다양성확보와 농가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다. 인증이라는 제도적 가이드라인 이전에 소위 ‘얼굴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 스스로의 자각과 기준, 실천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소비의 조직화다. 완주건강밥상꾸러미 사업과정을 되짚어보면 소비자들은 각각 홀알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즉 로컬푸드 가치보다는 꾸러미상품의 가격과 만족도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떼알구조로 바꾸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로컬푸드 농식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영역만큼의 무게중심을 갖는다. 직배시스템 확대, 정기적인 모니터링, 현장방문프로그램, 온-오프라인상의 생산자-소비자 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신뢰관계가 로컬푸드의 근원적인 추진동력이 되므로 일반적인 상품마케팅이 아닌 ‘가치마케팅’과 ‘관계마케팅’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시장의 창출이다. 로컬푸드가 예측가능한 소비와 예측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시장의 규모만큼 기획생산과 계약재배를 조직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공공정책의 특성을 살려 농민장터, 전문매장, 공공조달 등 로컬푸드형 시장을 확대해갈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민간중심의 전문운영조직 정비다. 추진조직은 기획생산-통합물류-소비개척을 일관된 관점하에 통합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장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농식품 생산-유통체계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조직형태는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으나, 생산자-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조직으로서의 근본취지와 활동방식은 견지되어야 한다. 행정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운영조직에서는 계약재배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등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협력체계는 식량정책협의회와 같은 지역 내 통합적인 먹을거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은 생산의 재구성, 물류 및 소비의 조직화, 생산자와 소비자간 쌍방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역농업 영역에서 로컬푸드 영역을 안정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중장기 과제로 먹을거리와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접목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식량주권, 가족농 보호, 시민의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환경보전, 식품안전 및 보건 측면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책 전환의 논리는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 바 ‘푸드마일리지’²⁾ 개념도입과 실천이다. 식품의 원거리 수송에 따른 탄소배

출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식품생산과 소비 장소를 가급적 일치시키거나 근거리로 한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이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 식품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량 파악에 유용한 지표가 바로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t)에 이동거리(km)를 곱한 값이다. 영국환경운동가 팀랭이 1994년에 푸드마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농산물의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에 착안한 개념으로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이 높으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한다는 주장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근, 2010, “지역순환형 사회만들기와 지역먹을거리운동”, 로컬푸드 전국포럼 발표자료
- 김용우, 2008. “로컬푸드운동의 제도화와 정책화의 전망”, 『로컬푸드운동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 김정호 외, 1992.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덕, 2005a. “지역식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농정연구」 통권 15호, pp.101-124.
- 김종덕, 2002. “패스트푸드의 세계화와 슬로우푸드 운동”,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제4권 제1호, pp. 87-106.
- 농협경제연구소, 2010.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정책”, 「NHERI리포트」 130호
- 농협경제연구소, 2009.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현황과 시사점”, 「CEO Focus」 제220호 pp.5-8
- 박덕병, 2005. “미국의 local food system과 공동체지원농업(CSA)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5집 1호
- 박진도, 2005.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농정의 혁신”, 전북지역농업연구원 기념심포지움 발표자료.
- 박진도, 2008.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지역재단 제5차 전국지역리더대회 발표논문집.
- 우장명 · 윤병선, 2009.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 윤병선, 2008.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pp. 501~522
- 정은미, 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천규석, 2004. 『쌀과 민주주의』, 녹색평론사.
- 허남혁, 2006. “제고장 먹거리(local food) 담론-쟁점과 가능성”, 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Brian Halweil, 김종덕, 허남혁, 구준모 옮김, 2006, 『로컬푸드』, 이후
- 제인 구달 · 게리 매커보이 · 게일 허드슨, 김은영 옮김, 2006, 『희망의 밥상』, 사이언스북스
- 카를로 페트리니, 김종덕 · 이경남 옮김, 2007. 『슬로푸드』, 나무심는사람
- 크닌 브류스터, 안진환 옮김, 2004.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Invisible Giant)』, 시대의 창.
- 쓰노 유킨도, 성삼경 옮김, 2003. 『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소농』, 녹색평론사